

Online Series

2015. 8. 12. | CO 15-20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한반도에 대한 함의

신종호(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최근 유라시아(Eurasia) 지역을 단일 경제권으로 통합하려는 시도가 경쟁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¹⁾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2013년 9월과 11월에 각각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방문하여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제시했다. ‘일대일로’ 전략은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인프라 건설과 무역 촉진 등을 통해 ‘육상 실크로드 경제지대’와 ‘해상 실크로드’를 구축하려는 구상이다. 현재는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오려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부상에 따른 글로벌 질서 변화 및 아태지역에서의 지정학적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제기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설립을 주도하자 국제사회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 즉, ‘일대일로’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국 내부의 개혁개방이 심화되고 역내 경제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도, 중국의 역내 영향력 증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1) 미국은 2011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뉴 실크로드 이니셔티브’를 제시하여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관통하는 국제운송회랑 구축을 시도했다. 러시아는 2012년 ‘신동방정책’을 제시하여 동시베리아와 연해주 등 극동지역 개발에 노력했고, 2015년에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EU)’ 창설을 주도했다.

특히 ‘일대일로’는 2013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과 비교할 때 목표 대상과 지역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향후 두 구상 간 주도권 ‘경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글은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일대일로’ 전략이 제기된 배경과 의도 및 글로벌·지역적 질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한반도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일대일로: 유라시아 경략(經略)을 위한 국가 대전략 구상

‘일대일로’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지대(一帶: One Belt)’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一路: One Road)’가 결합된 개념이다.²⁾ 즉, 중국의 서부지역과 중앙아시아-러시아-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지대’를 구축하고, 남부지역과 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유럽으로 연결되는 ‘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하여, 인프라 개발과 무역 증대를 통해 연선(沿線) 국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는 전략 구상이다.³⁾

‘일대일로’ 전략 구상 제기 이후 중국 정부와 지도부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전개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4년 11월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회의에서 400억 달러 규모의 ‘실크로드 기금’ 조성을 약속했고, 2015년 2월에는 ‘일대일로 건설 업무 영도소조’가 구성되어 당·정 핵심인사들을 포진시켰다.⁴⁾ 3월에는 중국 국가발전 개혁위원회와 외교부 및 상무부가 공동 명의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 추진을 위한 비전과 행동”을 발표하여,⁵⁾ ‘일대일로’ 실현을 위한 5대 협력 분야로

2)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3년 9월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 시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학 강연을 통해 ‘육상 실크로드 경제지대’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고, 동년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방문 시 인도네시아 국회 연설을 통해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을 제안했다. 그리고 2014년 4월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가 보아오포럼 공식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일대일로’ 개념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3) 현재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구상에는 총 64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고, 세계 인구의 63%(약44억), 글로벌 GDP의 37.3%를 차지한다. 중국 상무부(商務部) 홈페이지<<http://www.mofcom.gov.cn>>; FBIC, *The Silk Road Economic Belt and the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2015).

4) ‘일대일로 건설 업무 영도소조(一帶一路建設工作領導小組)’는 장까오리(張高麗) 정치국 상무위원을 책임자로 하여 왕후닝(王滬寧) 당 중앙정책실 주임, 왕양(汪洋) 부총리, 양징(楊晶) 당 중앙서기처 서기, 양제츠(楊潔篪)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포함하고 있다.

5) 여기에는 일대일로의 기본 개념과 배경, 협력 기제, 지역별 거점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는 18개 성(省)정부에는, 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서북권의 신장(新疆)·산시(陝西)·간쑤(甘肅)·닝샤(寧夏)·칭하이(青海)·네이멍구(內蒙古), 남아시아와 동남아 진출 통로인 서남지구의 광시(廣西)·

정책 소통(疏通), 인프라 연통(聯通), 무역 원활화(暢通), 자금 융통(融通), 민심 소통(相通) 등을 제시했다. 또한 올해 안에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기 위한 중국 지방정부 차원의 실행 계획안이 수립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일대일로’ 구상의 핵심 프로젝트는 인프라 건설이다. ‘육상 실크로드’의 핵심은 고속철 실크로드로서, 기존에 중국이 추진해온 고속철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신규 고속철을 건설함으로써 유라시아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⁶⁾ ‘해상 실크로드’의 핵심은 해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바다를 접하고 있는 국가 간 항구 투자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⁷⁾ 6개의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⁸⁾ 또한 중국은 파키스탄, 인도, 러시아 등과 인프라 건설을 포함한 대규모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했고,⁹⁾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AIIB의 설립을 주도하는 등 ‘일대일로’ 전략의 본격적인 실천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¹⁰⁾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제기한 배경은 국내적·지역적·글로벌 차원에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국내 경제적 차원에서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일대일로’ 구상을 제기했다. 이미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고속 성장에도 불구하고 과잉 투자에 따른

윈난(雲南)·티베트, 해상실크로드와 연결되는 연해지구인 상하이(上海)·푸젠(福建)·광둥(廣東)·저장(浙江)·하이난(海南), 내륙 교통요지인 충칭(重慶), 동북3성 헤이룽장(黑龍江)·랴오닝(遼寧)·지린(吉林) 등이 포함된다.

- 6) 이미 2014년 4월 중국 충칭-시안-카자흐스탄-러시아-벨라루스-폴란드-독일 뒤스부르크 간 국제물류 운송철도인 위신어우(渝新歐)가 개통(17일 소요, 11,179km)되었고, 동년 7월 중국이 수주한 터키 고속철 사업이 완공되어 중앙아시아 노선 일부가 완성되었다. 특히 중국은 유럽 철도건설 표준 규격에 따라 터키 고속철을 건설함으로써 향후 유럽 진출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7) 중국과 인접국 간 항구 협력 사례는 중국-방글라데시 항구 건설 투자 합의, 스리랑카 항구 발전 프로젝트에 중국이 차관과 기술 제공, 중국 윈난성 루이리와 미얀마 차우크푸항을 연결하는 1,564km의 송유관 건설 등이 있다. 중국은 현재 세계 97개 도시와 항구에서 해상실크로드 공동 건설을 모색중이다.
- 8) 경제회랑은 “서로 다른 경제권을 철도와 도로와 같은 물류망을 통해 점(點)으로 연결하고 이를 다시 선(線)과 면(面)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6대 경제회랑은 ① 중국-몽골-러시아, ② 신(新) 유라시아 대륙 교량, ③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④ 중국-인도차이나 반도, ⑤ 중국-파키스탄, ⑥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BCIM) 등이고, 이 중 핵심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이다.
- 9) 2015년 4월 시진핑의 파키스탄 방문 및 5월 인도 총리의 중국 방문 시 각각 450억 달러와 22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했고, 5월 시진핑의 모스크바 방문 시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유라시아 경제연합(EEU)’ 연계에 합의하고 25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에 합의했다.
- 10)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은 2014년 10월 총29개국이 초기 자본금 500억 달러에서 시작하여 1,000억 달러로 증액했으며, 2015년 6월 29일 총57개 창립회원국 대표가 참석하여 AIIB 협정문 서명식을 개최했다. 그동안의 협상 결과 중국이 30.34%로 가장 높은 지분율을 기록했고, 다음은 인도 8.52%, 러시아 6.66%, 독일 4.57%, 한국 3.81% 등으로 결정되었다.

효율성 저하, 동부연해와 중서부 내륙 간 발전 격차, 자원배분의 불균형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그동안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뚜렷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장기적 저성장을 특징으로 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 공급과잉 해소, 새로운 투자기회 창출, 낙후된 서부지역 개발, 시장 확대를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목적으로 ‘일대일로’ 전략 구상을 제기한 것이다.

둘째,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이 인프라 건설과 무역 촉진 등을 통해 주변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한 영향력 확대를 의도하고 있다. 즉, 주변국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상호 호혜적(win-win)인 결과를 창출하고, 결국은 유라시아의 경제통합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곧 최근 시진핑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친·성·혜·용¹¹⁾’을 핵심 이념으로 하는 주변국 외교의 본격적인 추진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중국 정부는 베트남과 필리핀 등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들과 ‘해상 실크로드’ 구축을 통해 관계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중국위협론’을 완화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다.

셋째, ‘일대일로’ 구상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대한 우회적인 대응으로써,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중국의 ‘서진(西進)’ 전략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즉, 중국은 최근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을 중국 ‘봉쇄’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서쪽을 중시했고,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국가들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려는 ‘일대일로’ 전략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AIB 설립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 등의 반대에 직면했지만, 주변국(한국, 베트남 등)은 물론 인도와 러시아 및 다수의 유럽 국가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를 통해 중국은 향후 ‘일대일로’ 추진 과정에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특히 국제질서와 규범을 둘러싸고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넷째, 중국은 해외 자원과 에너지 획득 및 안정적인 수송로 확보 차원에서 중앙아시아와 동남아를 포괄하는 ‘일대일로’ 구상을 제기했다. ‘육상 실크로드’의 핵심인 중앙아시아의

11) 2013년 10월에 열린 ‘주변외교 업무 좌담회’에서 중국의 새로운 주변외교 이념으로 ‘친(親)·성(誠)·혜(惠)·용(容)’이 제시되었다. 친(親)은 주변국과 친하게 지내는 것, 성(誠)은 주변국에 성의를 다하는 것, 혜(惠)는 주변국과의 상호 호혜(win-win) 발전, 용(容)은 주변국 포용 등을 의미한다.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의 ‘신실크로드’ 구상이나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전략의 하나로 ‘일대일로’ 구상을 제기한 것이다. 동남아시아 역시 ‘해상 실크로드’의 핵심지역으로서, 중국 원유 수입의 80%가 말라카 해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대일로’ 전략 구상의 핵심 대상 지역이다. 다만, 중국은 그동안 남중국해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분쟁을 겪어 왔고, 최근에는 미국과도 갈등을 벌이고 있기에 향후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의 성공 여부는 이 지역에서 중국이 관련국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일대일로’ 전략은 시진핑 시대의 중국이 ‘강대국 정체성’을 기반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전략 구상이다. 현재 중국이 처한 국내외적인 현실을 반영하고, 미래 글로벌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즉, 국내적으로는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지역 차원에서는 미국의 중국 봉쇄에 대한 대응과 ‘중국 위협론’ 완화 및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는 미국과의 국제질서 및 규범 경쟁 본격화에 대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지역질서에 대한 영향

‘일대일로’는 시진핑 체제의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대전략 구상으로서, 풍부한 자금력과 국가지도부의 추진 의지 및 관련 국가들의 긍정적인 호응 등을 볼 때 향후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일대일로’는 현재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에 있고, 전개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변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내년부터 시작되는 “국민 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13차 5개년 계획(規劃)(2016~2020)”의 핵심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가진 중국이 물류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주도할 경우, 역내 경제권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곧 글로벌·지역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첫째, ‘일대일로’ 구상이 갖고 있는 자체적인 경제적 위험성을 극복해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막대한 대출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연선 국가들이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을 경고하며, 중국이 연선 국가들에게 경제협력 협정을

통해 저리의 차관을 빌려주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중국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¹²⁾ 또한 현재 저성장 기조 속에 중국 지방정부가 ‘일대일로’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다.

둘째, ‘일대일로’ 전략의 제기로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갈등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은 ‘일대일로’ 구상을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미국 주도의 국제규범과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물론 중국이 AIIB 설립 주도 등을 통해 미국 중심의 질서에 도전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5년 6월 29일 AIIB 협정문 서명식에서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같은 기존의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 관계를 적극 모색하고, AIIB를 개방과 포용, 상호공영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건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¹³⁾ 하지만 갓 출범한 AIIB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중국이 경제분야에서 국제질서와 규범을 주도할 수 있게 되고, 안보분야에서도 중국 주도의 국제규범 창출 노력이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곧 글로벌 차원에서 미중 간 전략적 갈등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 해소가 관건이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관련국이 경제적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영주의(共榮主義)’를 강조하지만, 인도와 러시아 등 강대국은 물론 베트남 등 중국과 분쟁을 경험한 국가들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지역질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먼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경제제재에서 탈피하기 위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호응하고 있지만 중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심을 갖고 있다. 인도 역시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일대일로’ 구상에는 호응하고 있지만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는 우려를 갖고 있다. 결국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주변국과 강대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국가 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넷째, 동아시아·태평양지역 차원에서 지정학적·지경학적 복합성이 심화될 것이다. 현재 역내 국가들은 경제발전 수준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중국과 분쟁 경험이 있는 주변국들의 우려와 염려도 여전히 존재하며, 미중 간 역내 외교적·경제적 영향력 확보를 위한 경쟁

12) “The Risks behind China’s Growth Gamble,” *CNBC*, (April 12, 2015).

13) 『신화망(新華網)』, <http://news.xinhuanet.com/ttgg/2015-06/29/c_1115756477.htm>.

역시 치열하다. 미국은 일본·한국·호주 등과의 양자동맹 및 ASEAN 중심의 다자 협력을 중시하고 있고, 중국은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주변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2015년 6월 ‘무역협상 촉진 권한(TPA)’을 부활시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출범을 서두르고 있고, 중국 역시 포괄적 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향후 AIB 운영 과정에서 그동안 역내에서 아시아개발은행이 보유하던 독점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거대 금융기구 간 ‘경쟁’ 구도가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곧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여 대외전략을 수립할 경우 국가의 ‘전략적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외전략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반도에 대한 합의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제기한 시점과 비슷한 2013년 10월에 박근혜 대통령 역시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물류·교통·에너지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구축한 뒤, 장기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71%를 하나로 묶는 거대한 단일시장을 만들자”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고, 대륙과 해양의 연계 및 가교 역할을 하는 ‘중견국 외교’ 추진도 가능해진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다만,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본격화될 경우 한중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도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유라시아 지역을 둘러싼 경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중국에 비해 자금력이 약하고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가 미흡한 상황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오히려 ‘흡수’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유라시아 전역에서 ‘경쟁’하기보다는 지역별·분야별로 전략적인 연계를 시도함으로써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현재 중국 서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일대일로’ 전략의 초점을 동북3성(길림, 요녕, 흑룡강) 지역과 한반도까지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그동안 ‘동북 진흥’ 계획과 ‘창지투(長吉圖: 창춘-지린-투먼) 개방 선도구’ 계획 등을 통해 동북3성 지역의 인프라 개발과 교통·물류 체계 및 대외통로(借港出海)를 개발해 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동북3성 지역의 경제 성장률은 정체될 거듭하고 있고, 결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과의 연계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 최근 중국 지도부가 동북3성 지역을 방문하여 접경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조했다라는 점은 ‘일대일로’ 전략과 한반도의 연계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게 되었고,¹⁴⁾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북중 경협이 활성화될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북한 당국의 참여나 호응 없이 유라시아 지역 협력이 완성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후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 우선적으로 협력을 진행한 후 점진적으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동북아 정세 및 남북 경색국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북·중·러 3국 접경지역에서의 에너지·교통·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경제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지정학적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북한이 직면한 식량난·에너지난·외화난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지정학적 접근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대일로’와의 전략적 연계성을 통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국과의 양자 및 다자적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먼저, 중국·러시아 등과 양자 관계 발전을 통해 ‘신뢰’를 축적해야 하고, 미국과는 전략적 소통을 유지·강화해야 한다. 다음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나 9월 3일 ‘전승기념일’, 12월 ‘광역 두만강계획(GTI)’ 총회 등과 같은 다자무대를 활용하여 우리의 통일·외교 전략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해야 한다. 특히 유라시아를 둘러싼 강대국 간 이익경쟁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이익이 그 어떤 전략적인 결정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KINU 2015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4)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5년 3월 전인대 기간 중 동북3성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동북지역의 노후 공업기지 진흥을 강조하면서 동북3성 지방정부의 북한, 러시아 등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직접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 역시 3월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일대일로’와 지방의 개방·개발을 결합시킬 필요성을 지적했다. 7월에는 시진핑이 직접 길림성과 요녕성을 두 차례 방문하여 “13·5규획 기간(2016~2020) 동안 동북의 부흥을 위해 국가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창지투 개방 선도구’ 사업에도 관심을 표명했다.